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G6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30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카메라·오디오 성능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실패했다. LG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5년 이후 줄곧 3%대에 머무르고 있다.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확고한 양강 체제를 구축한 애플과 삼성전자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고 중저가폰 시장에서는 가성비 비를 내세운 중국 업체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된 탓이다.

이어지는 실적 부진에 LG전자는 11월 황정환 부사장을 새로 MC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조직 효율화와 공정 개선 등 사업구조 개선을 마무리하고 MC사업본부장 직속으로 단말사업부와 선행상품기획FD를 신설하는 등 조직도 개편했다. 또한 프리미엄폰 출시 이후 파생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부품을 모듈화해 조립공정을 단순화하는 기초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막대한 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과 떠오르는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갔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추정에 따르면 화웨이의 2017년 스마트폰 출하 대수 기준 점유율은 10.2%였고, 오포 7.8%, 샤오미 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 브랜드 중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5년 7%대에서 10%를 넘기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화웨이는 중국, 인도 등 저가 시장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0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연산용 칩 '기린 970'이 탑재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10'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분당 2천5개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촬영하는 대상에 따라 카메라의 설정을 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

유럽 출고 가격이 699유로(약 93만2천 원), 메이트 10 프로는 799유로(106만5천 원)로 애플, 삼성전자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가격대를 높였다. 국내 시장에서도 8월 '비와이패드 2'(KT용), 11월 '미디어패드'(LG유플러스용) 등 태블릿을 내놓고 12월에는 KT를 통해 '비와이폰 2'를 출시하면서 중저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갔다.

금융업

■ 개요

2017년 금융산업은 국내 금융업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금융산업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대출과 송금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국의 인가를 받고 출범했다. 인터넷은행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장기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 1천 400조원을 넘어서자 한국은행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가

지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각종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발표했고 가계부채 대응책으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2018년 초부터,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는 2018년 하반기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의 금융공기업 수장, 각 금융협회장, 금융기관장 인사에서는 부산 출신 금융권 인사들의 모임인 '부금회' 출신들이 연달아 발탁됐다. 새로 들어선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연체금리 인하, 저소득층 장기연체 채권 탕감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급증에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강원랜드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경영진이 주요 고객이나 내부 직원, 정치권 인사 등의 채용 청탁을 받고 신입직원을 선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채용 비리 수사 대상이 되는 오명을 썼다.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투자자금이 몰린 데다 세계 경기 호전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는 신기록 행진을 벌였다.

증권업계에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 투자은행(B)으로 지정됐다.

■ 인터넷은행 출범... '카뱅' 돌풍



▲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 영업이 시작된 7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세빛섬 FC컨벤션에서 열린 카카오펁 B-day '언베일링 세러머니'에서 관계자들이 시연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4월 3일, 제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펁이 7월 27일 각각 출범했다. 국내 금융업계에서 새로운 은행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고 출범한 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이다.

지점과 창구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은행이 '뱅크 에브리웨어' 시대를 열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24시간 365일 어디에서나 고객에게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지점이 없어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 대출 등 대부분 업무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시중 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대출 금리와 높은 수준의 예금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 이어 뒤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한 달 만에 계좌개설 고객 291만 명, 수신액 1조8천억원, 대출금 잔액 1조2천900억원, 체크카드 발급 신청 204만 건을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금리를 주요 상품 중 적금·정기예금은 연 2.0%(1년 만기), 30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대출(일명 '비상금대출')은 최저 3.5%로 정했다. 한도가 1억5천만원인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86%였다.

인터넷은행은 은행 지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 편의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케이뱅크는 '#송금 금액'(예: #송금 10000)을 문자로 보내면 상대방이 케이뱅크 앱 알람을 열어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카카오뱅크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추출해 활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을 도입해 재직 증명서나 소득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봉의 최대 1.6배, 1억5천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카카오뱅크는 또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이들에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결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핀테크를 둘러싸고 인터넷은행과 기존 은행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시중 은행들은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비해 각종 모바일 플랫폼을 내놓으며 모바일 금융에 속도를 냈고 편의점 인출, 영업점 '다운사이징' 등을 추진했다. 정책 상태에 빠졌던 국내 금융업계에 혁신과 개혁이 속도를 내는 이른바 '메기효과'가 독특히 발휘된 셈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사실만으로도 시중 은행들의 모바일플랫폼 강화 등 금융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금까지 고객들은 은행 '일'이라거나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고 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 시 은행이 정한 규칙에 따라야 했다."며 "케이뱅크는 고객의 관점에서 원하는 은행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은산분리 완화 논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흥행엔 성공했지만,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성사되지 못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 증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었다.

현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사금고'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 주주여서 최대 주주가 은행의 덩치를 키우고 싶어도 이 조항에 막혀 자본을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 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됐으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더구나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에서 특혜를 받았다거나 주주들이 옵션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서 은산분리 완화는 동력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 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또 다른 특혜 시비도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지분 매매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와 이를 인가한 정부가 모두 은산분리의 완화 및 폐지를 전제로 삼았으며, 이는 인가과정의 특혜였다는 것이다. 이런 각종 특혜인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힘을 잃었고 인터넷은행들은 증자의 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계부채 사상 최대 행진...1천400조 돌파

가계부채가 저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



르면 2017년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419조1천억원으로, 3분기 동안 31조2천억원(전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가계신용은 2016년의 이례적 폭증세가 2017년에 다소 누그러졌지만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증가율은 여전히 이어졌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1분기(16조6천억원), 2분기(28조8천억원)보다 많다. 전 분기 대비 증가율도 1분기(1.2%), 2분기(2.1%)보다 높은 2.2%다.

1천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저금리 장기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부문별로 보면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천341조2천억원으로, 3분기에 28조2천억원(2.1%) 늘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5조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가 전분기(12조원은) 물론 2016년 4분기(13조5천억원)보다 많다. 주택담보대출은 8조원 증가해 1분기(6천억원)와 2분기(6조3천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예금은행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7조원 늘어나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신규 영업 개시 효과로 인터넷은행 대출은 2조7천억원 늘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4조3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전분기(6조3천억원)보다 줄었다. 이는 2015년 1분기(1조5천억원) 이래 최소 규모다. 보험과 연금기금,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8조9천억원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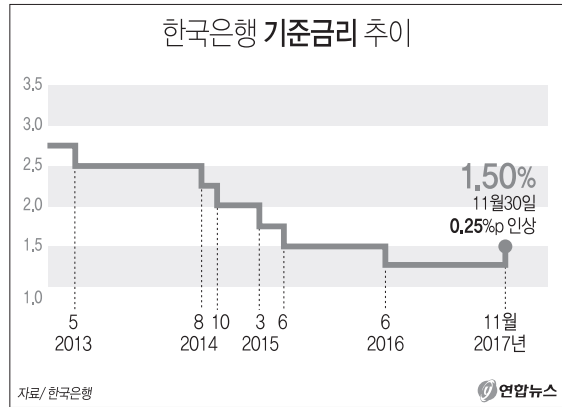
판매신용 잔액은 3분기에 3조원 늘었다. 전분기(1조9천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여신전문기관이 3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는 1천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별개로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채적상환능력심사제) 등의 규제를 2018년에 도입하는 한편 은행 예대율 가중치를 개선해 시중 자금이 부동산시장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사상 최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행보와 함께 국내에서도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풀렸던 유동성이 회수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2017년 11월 30일 오전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2016년 6월 이래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은의 금



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이 총재는 2017년 6월 한은 창립기념 행사 연설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 중 이일형 위원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급증에 힘입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속보치)를 기록했고 10월 이후에도 수출 증가세는 견고했다. 이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려 잡았고, 2018년 성장률도 3.0%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잠재성장률(연 2.8~2.9%)을 웃도는 수준이며,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북한 리스크와 사드 갈등에 둘러 있던 소비심리도 2010년 12월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분위기다.

금융시장은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추가 인상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2018년에 1~2회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 뿐 경기 회복의 '온기'가 퍼지지 않았는데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내수경기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 미 금리 인상 횟수 등이 추가 금리 인상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DTI · DSR 등 부동산대출 규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DTI가 2018년 1월 31일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시행된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하지만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따라서 신DTI가 시행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실제 2017년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천800만원에서 2억2천700만원으

로 3천100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질 때 변수는 대출 기간이다. 같은 돈을 빌려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5억원을 만기 20년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완전 분할상환은 DTI 분자에 들어가는 연간 원금 상환액이 2천500만원(5억원/20년)이다. 거치기간은 대출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거치기간 2년을 두면 연간 원금 상환액은 2천780만원(5억원/18년), 거치기간이 5년이면 3천330만원(5억원/15년)이 된다.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하는데, 연간 원금 상환액은 5천만원(5억원/10년)으로 커진다.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으면 이를 25년으로 나눠 DTI 계산에 넣는다. 이자 상환액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한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잔액 기준)에 1%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다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한다.

신DTI는 연간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현행 DTI와 조금 다르다. 우선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한다. 1년 전보다 소득이 급격히 변동(±20%)된 경우 2년 치 소득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승진 등 증가한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면 최근 소득만 반영한다. 소득이 1년 미만이면 1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10%를 차감한다.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입증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장래예상소득 반영의 연령 제한(40세 미만)은 없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으면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인정되는 소득, 신고소득은 이자·배당금·임대료·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되는 소득이다.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도 연간 소득에 더해진다. 이때 배우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이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더해진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 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된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갚겠다고 약정할 경우 신규 대출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2018년 3월부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심사하는 제도다.

DTI와 RTI에 이어 2018년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도 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하는 자율적

인 여신심사체계를 말한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 금융권 인사 돌풍...부금회 부상

문재인 정부 들어 부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금융권 수장에 오르면서 PK(부산·경남)가 금융권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수장에 오른 부산 출신 인사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 등이다.



▲ 김태영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12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13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깜짝 인사였는데, 그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금융경제위원회에 공동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의외의 인물로 꼽힌다.

거래소는 2017년 8월 말 이사장 공모를 했다가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다며 전례 없던 추가 공모를 했는데, 이때 지원한 정 이사장이 뒤늦게 뛰어들어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김성진 전 조달청장과의 경쟁에서 이겼다. 금융권에서는 정 이사장이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제 고문이었다.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은 출생지는 강원도 평창이지만 부산대 경영학과를 나와 부산 출신 금융인으로 분류된다.

■ 은행·금융지주 최대 실적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은 2017년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자 마진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다.

KB금융은 2017년 연결기준 순이익이 2016년보다 54.5% 증가한 3조3천119억원이라고 밝혔다. 2008년 KB금융지주 출범 이래 연간 순이익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KB금융은 신한금융을 누르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금융권 1위에 올라섰다.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2조1천750억원으로 2016년보다 무려 125.6% 증가했다.

신한지주는 2017년 순이익이 2조9천179억원으로 2016년

대비 5.2% 증가했다. 다만 명예퇴직금과 대우조선, 금호타이어 관련 총당금 등으로 인해 4분기 순이익은 2016년 동기보다 65.4%나 줄어든 2천1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2017년 1조7천1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2016년 대비 11.8% 감소했다.

하나금융은 2017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2조368억원으로 2016년보다 53.1%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2월 지주사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이다. 핵심 관계사인 KEB하나은행의 경우 2017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2조1천35억원으로 통합은행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은행은 2017년 순이익(연결기준)이 2016년 대비 19.9% 증가한 1조5천121억원으로 집계돼 5년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4분기 순이익은 1천340억원으로 2016년 동기보다 16% 줄었다. 우리은행만의 순이익은 1조3천991억원으로 2016년 대비 23.3% 증가했다.

농협금융은 2017년 순이익이 8천598억원으로 2016년 3천210억원보다 167.9% 늘었다. 농협금융이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포함하면 순이익은 1조1천272억원으로 1조원을 넘는다. 다만 4분기 순이익은 1천313억원으로 2016년 동기 대비 40.9% 감소했다. 계열사 중에선 농협은행이 6천52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2016년 1천111억원과 비교해 순익 규모가 6배 가까이 커졌다.

증권

■ 개요

2017년 국내 주식시장에 '불마켓'(Bull market·황소장·장기간에 걸친 추가 상승장)이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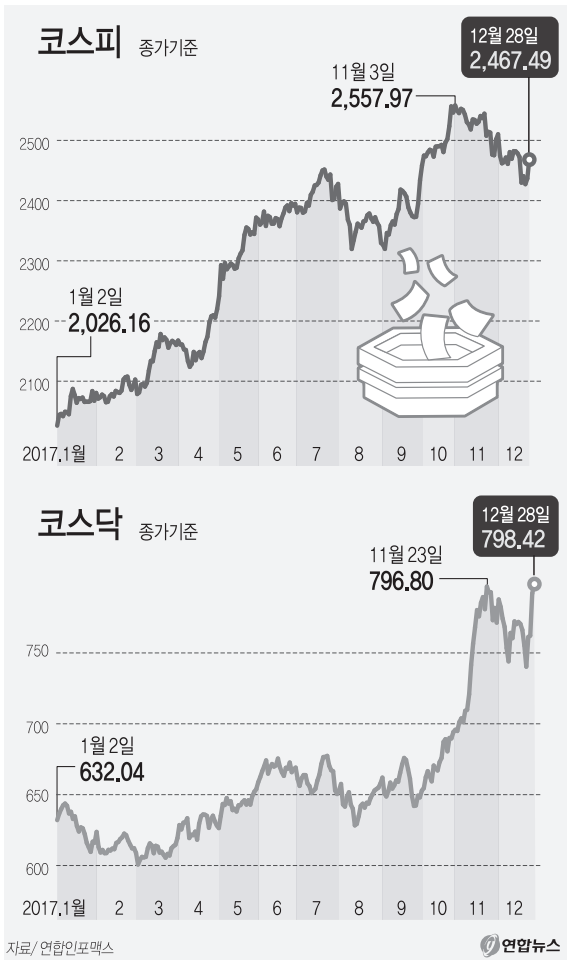
코스피지수는 지난 6년 동안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끝내고 사상 첫 2,500 시대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 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큰 폭의 이익 상승을 이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코스닥지수 역시 하반기 급상승하면서 10년 만에 800선을 밟았다. 바이오 업종이 '과열 논란'까지 겪으며 급격하게 올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 사상 첫 코스피 2,500시대 열려

코스피지수는 폐장일인 2017년 12월 28일 2,467.49에 장을 마쳤다. 2016년 말보다 21.76% 올랐다. 2017년에 기록된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치(종가 기준)는 11월 3일의 2,557.97이었고, 가장 낮았던 날은 증시 개장일인 1월 2일(2,026.16)이었다. 연초부터 큰 부침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의미다.

코스피지수는 2011년 5월 이후 2,200선을 넘지 못하고 2,000~2,200선에 갇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4일 증가 2,241.24를 기록하면서 6년 동안 갇혀 있던 박스권 천장을 깨고 거침없는 기록 경신 행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같



은 달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넘었고, 7월에는 2,400, 10월에는 마침내 2,500 고지까지 정복했다.

이 과정에서 7월 13~24일 8거래일 동안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진기록이 나왔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쓰기도 했다.

2017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천606조원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처음 1천300조원을 넘겼는데 2017년에는 300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단숨에 1천6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조3천억원으로 2016년(4조5천200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다만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은 3억4천만주로 2016년(3억8천만주) 대비 9.0% 줄었다.

■ 불붙은 '대형주'…삼성전자 41.40% 상승

코스피지수의 최고치 행진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국내 기업 수출 증가와 실적 개선, 외국인 자금유입 등이 밑거름이었다.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된 정보기술(IT)·반도체·화학 등 대형 경기민감·수출주가 약진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